

지역NGO의 정책참여와 협력방안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송 두 범 지역개발연구부장

1. 머리말

최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과 NGO간의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방정부와 지역NGO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지방정부와 지역NGO간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정부에는 땅(자연자원)이 있지만, 이를 물적 자산으로 바꿔주는 기술(인적자원)이나 이것을 파괴로부터 보호하는 조직(사회자본)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 소재한 NGO와 지방정부간의 바람직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지역NGO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행정과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지역NGO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고, 그 협력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지역NGO에 대한 이론 탐색 둘째, 국내외 지역NGO의 정책참여 및 협력실태 분석 셋째, 충청남도의 지역NGO 및 자원사업 실태 분석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의 관계 분석 다섯째, 지역NGO간 관계를 분석 여섯째,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에 대한 정책대안 모색 등이다.

이 연구는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NGO 140개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자원을 받은 71개 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시간적으로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지역NGO지원사업 평가를 위해 2000년을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NGO 140개, 충청남도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교차분석, 지역NGO와 공무원집단간의 차이검증을 위해 T검증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2. 충청남도 지역NGO 및 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 분석

2.1 지역NGO의 현황 및 문제점

2001년 현재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NGO는 총 140개 단체이며, 주로 자원봉사 환경운동 의식개혁 지역사회개발 및 애향운동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NGO의 설립목적은 보면 전체 140개 단체 중 일반행정 42개, 여성·청소년 18개, 환경·자연보호 14개, 교육연구학술 10개, 지방자치·주민자치 9개 등의 순이다.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80년대와 96년 이후에 설립되었고, 전체의 71.4%가 500인 이하의 회원을 가진 영세규모의 단체들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기관·NGO와의 협조·지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의 진전과 사회경제적 분화현상에 의하여 지역NGO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한국 NGO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500인 이하의 회원을 가진 지역NGO가 100개로 전체의 71.4%를 차지하고 있으며, 500~999인이 16개로 대부분의 지역NGO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NGO에 대해 지역NGO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기능수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완기능, 자원봉사, 주민권의 확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체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지역NGO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내 지지기반의 취약성 지역NGO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지역NGO의 재정적 취약성 등을 들고 있다.

2.2 민간단체 보조사업 실태분석

충청남도에서는 지역NGO의 공익사업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도민에 대한 공익서비스 향상, 지역NGO의 사업수행능력 지원을 통한 NGO활동 기반강화, NGO를 매개로 도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지

방자치) 확대 발전을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34개 단체 46개 사업에 294,000천원, 2000년도에는 58개 단체 60개 사업에 390,000천원, 2001년도에는 71개 단체 74개 사업에 390,065천원을 지원하였다.

2001년 충청남도가 지역NGO에 대해 지원한 금액 중 1천만원 이상 지원 받은 단체는 9개 단체(12.7%)¹⁾이며, 주로 국민운동단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원 이하를 지원받는 지역NGO들은 주로 자원절약·환경보전, 시민참여단체 등으로 시·군 단위 지역NGO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시·군으로부터도 지원 받은 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액별 분석을 통해 볼 때 제한된 예산으로 가능한 많은 지역NGO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배분하다 보니, 나누어주기식 형태의 예산배분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효율적·효과적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사업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지원금액은 시민참여, 자원봉사,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사업건수는 시민참여, 자원봉사, 자원절약 환경보전, 인권 여성 청소년권익신장 등의 순으로 지원하였다.

1) 새마을운동중앙회 충남도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 충청남도 새마을부녀회, 충남지구 청년회의소, 한국자유총연맹 충남지부, 21세기 청년자원봉사네트워크, 대한적십자사 충남인명 구조대,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

정부와의 관계유형별로 살펴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문고 등 국민운동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들에게 전체 지원금액의 50.3%를 지원하였다.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견해 및 문제점으로 첫째, 지역NGO 지원사업에 대해 지역NGO관계자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공무원들은 일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지역NGO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관련 공무원들은 지원을 위한 심사단계에서의 공정성, 사업비 사용용도의 유연성, 사업종료 후 정산과정의 단순화, 지역NGO관계자는 행정기관에 대한 종속으로 지역NGO의 자율성 상실, 지원NGO에 대한 평가기준 불합리 등을 지적하고 있다.

3. 지역NGO의 정책참여 및 협력방안

이러한 지역NGO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참여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지원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NGO에 대한 지원방안은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극복, 지역NGO지원재단 설치 운영을 통한 재정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 강화, 지역NGO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정보제공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집단의 지역NGO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정책형성 및 평가과정에 지역NGO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NGO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나 체육활동 등을 개최하며, 공통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회를 마련하여 지역NGO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지원사업 때문이 아니라 지역NGO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지역NGO와 공무원집단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교육원에 NGO와 관련된 교과목을 편성하여 공무원들의 지역NGO에 대한 관심 및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주요현안문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공동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100인 이하의 조직의 경우 아예 신청자격이 되지 않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의 보조금이 국민운동단체에 지원되어 특정단체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조금은 연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회성 이벤트 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안정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개와 경쟁의 원칙이 적용되고 지역NGO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NGO지원재단”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든 지역NGO에 대한 지원은 이 지역NGO지원재단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설립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도민의 모금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NGO들이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행사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무상 혹은 실비만 받고 관련시설이나 비품을 지역NGO에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이전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지역NGO사무실을 제공하여 지역NGO들이 지역사회에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NGO에 대한 간접적인 보조를 좀 더 다양화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 지역NGO종합센터 설립, 공공서비스 요금인하 등을 통해 지역NGO가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우편료·통신료·전기료·상하수도료와 같은 공공요금의 할인, 컴퓨터 통신망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인프라 구축지원, 공공방송국의 공익방송지원, 상근활동가의 재교육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 이용, 공공프로젝트 계약 등의 간접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현행의 정보공개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함으로써 지역NGO가 보다 쉽게 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현안문제를 인터넷, 도정신문, 도정모니터이원, 도정책자문위원, 지역NGO 등에 입체적으로 알려 도정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지역NGO참여 방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지역NGO 참여 방안에는 지역NGO의 도덕성 및 사회적 책임 배양, 의욕적인 지역NGO 활동가의 육성, 실질적인 정책참여 기회 제공, 정책참여 형태의 다양성 모색,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정책참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NGO의 경

우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보조금의 경우 정부회계 절차에 따라 정산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를 채용할 여력이 없는 지역NGO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NGO는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NGO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대안은 스스로 검증 및 책임짐으로써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배양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욕적인 지역NGO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대학교에 NGO학과 설치 유도,²⁾ 지역대학의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에 NGO지도자과정 설치³⁾ 지역NGO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역지도자과정 신설,⁴⁾ 인터넷 지역NGO과정 개설⁵⁾ 등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지역NGO의 정책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각 실과에서는 도민전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대단위 사업 등 중요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원안을 작성할 때 시책의 원안을 지역NGO에 공표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⁶⁾이 필요하다.

일정기간동안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민이나 지역NGO가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원안을 수정하거나 의견제시가 없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는 사실을 도민 및 지역NGO에 알림으로써 정책원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역NGO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입안단계에서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에 적합

2) 지역대학의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에 NGO지도자과정 설치.

3) 원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산대학교 사회교육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사회교육원 등에 NGO지도자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4) 지역NGO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지역NGO지도자과정 신설. 한신대 사회과학연구소 수원 경실련에서 '경기지역사회 NGO(비정부기구) 대학 공동강좌'를 운영했다.

5) 인터넷 지역NGO과정 개설, 경희사이버대학교 사이버NGO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다.

6)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도정신문에 게시, 지역NGO에게 시책의 원안을 발송, 민원실에 비치 등의 방법

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NGO의 이러한 정책참여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긴장감을 갖게 함으로써 좀 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 정책과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방안 모색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가 사전에 현안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지역NGO가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모델의 공동개발 및 보급,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운영,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진흥운동, 시민운동 전개, 자치센터 운영상황 모니터링, 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NGO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관공동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 협력 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가칭 “충청남도 민간단체지원 촉진조례”제정, 지역NGO의 전문성 강화, 지역NGO 전담부서의 확대 및 신설 자치단체 내 지역NGO활동공간 조성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참여 및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남도 민간단체 지원촉진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가칭 “충청남도 민간단체 지원촉진조례”에는 지역NGO센터와 지역NGO지원재단, 자치단체 행정정보제공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지역NGO들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

기 때문에 지역NGO의 전문성만 강화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NGO간의 협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NGO의 전문성 강화는 지역NGO가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역NGO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타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NGO간 연대함으로써 분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NG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들을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NGO의 고유목적 사업뿐만 아니라 홍보 등을 담당하는 웹디자이너, 인터넷 전문가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시대적인 흐름에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충청남도에서는 자치문화국 도의새마을과 도의사회계에서 민간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충남정신발양 시범마을조성,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민간단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NGO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기능이 매우 미약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각 관련부서별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NGO의 관련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를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NGO에 대해 자치단체 소유건물에 지역NGO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내에 확보된 지역NGO 공간에 활동에 필요한 집기를 제공하고, 이들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 지원하며 필요하다면 필요인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역NGO사무실을 한 장소에 집적한 지역 NGO센터의 설립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충청남도과 같이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NGO의 설립위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NGO센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는 많은 의문이 생긴다.

3.4 지역NGO간 협력 방안

우선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지역NGO중 경험이 많고 역사가 오래된 지역NGO, 리더십을 가장 잘 발휘하는 지역NGO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협력 연계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NGO들은 정보, 프로그램계획, 수행 및 평가과정 등 소프트한 측면에서의 협력 연계와 특정사업에 대한 협력 연계를 시작으로 점차 예산 및 시설 공유 등 전반적으로 협력 및 연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지역NGO연합체를 설치하고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NGO 연합체에서는 학술세미나, NGO지도자 연수 교육, NGO단체 및 NGO지도자 발굴, 자료의 제공, 지역 NGO업적에 대한 홍보, 연합체 공동홈페이지 운영, 지역 NGO자료센터 운영, 지역NGO공동프로그램 개발, 지역 NGO 인력풀(pool) 관리, 지역NGO간 교류 및 협력의 장 제공, 지역NGO의 공동규약 제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5 지역NGO 지원사업 개선방안

지역NGO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단체 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단체별 지역별 배분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여 지역NGO의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국 NGO의 지부형태의 지역NGO들보다 독립지역 NGO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전국NGO 지부형태의 지역NGO들은 비교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재정, 인력, 관리체제 등이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어 정부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가능하면 전국NGO지부형태의 지역NGO들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독립적 지역NGO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등 국민운동단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지역NGO의 자율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역NGO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일회성 행사, 캠페인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지역NGO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공모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 행정이 원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먼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시책 중 지역NGO가 추진할 경우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각 실과별로 파악하여 이를 지역NGO수행체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맺음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에 지역NGO가 참여한다는

문제는 행정의 능률성과 대응성 그리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효과 이외에도 지역사회가 연대적인 공동체로 작동하기 위한 횡적 연계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공동체 형성에는 지역주민과 이들로 구성된 지역 NGO들을 포용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지역 NGO들의 의사와 능력을 정책과정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금까지의 행정관행에서 벗어나 지역 NGO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NGO의 다양한 정책참여 및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와 NGO관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중앙 정부와 전국단위의 NGO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및 협력에 대한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지

역 NGO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참여 및 협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담당자나 지역 NGO관계자 간의 갈등과 불신,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양자 모두 도민(수요자)에 대한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 NGO와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참여 및 협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지역 NGO와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정책참여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설문에 응답한 지역 NGO의 숫자가 부족하여 지역 NGO 전체를 대표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보완된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 "정부와 NGO관계: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강화를 위한 비교론적 검토",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정부와 NGO」, 2000.
- 김수현·박은철, 서울시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0.
- 김종래·강제상, 국정관리와 NGO의 역할,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하계 학대회 발표논문, 2000.
- 김준기,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지원사업 분석",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박상도, 「NGO(비영리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향」, 한국법제연구원, 1997.
-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 협력의 변증법적 조화 모색", 「한국행정논집」, 1999.
- , "비영리단체의 개념을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제8권 2호, 1999.
- , NGO의 개념적 논의, 한국NGO(학)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집, 2000.
- , "비영리단체(NPO)의 개념을 정립을 위한 이론적 논의",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2호, 1999.
- 박희봉, 지역사회단체 참여와 사회자본,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9.
- 신광영, 비정부조직(NGO)과 국가정책, 「한국행정연구」, 제8권 제1호, 1999.
- 신희권,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한국행정연구」, 제8권(제1호), 1999.
- 이근주,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9.
- 이희태, "지방정부의 NGO지원사업 분석: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제4권 제1호, 부산: 한국지방정부학회, 2000.
-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1998.
- 정운수,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의 체계화 방안, 「국정관리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0.
- 조석주·김필두, 지역 NGO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안,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0.